

국정 요직 두루 포진... 지방정부 개편 최대 관심



논설위원이 간다
지방선거 속으로

정후식
논설실장

민주화·86세대 바람 일으킬까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와 호남 출신들이 전면에 부상했다. 민주화와 사회 개혁을 이끌며 시대 변화를 주도해 온 인사들이 청와대와 내각, 정치권의 핵심 요직에 포진해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운동권'이라는 과격 이미지와 함께 부침을 겪었던 86 그룹은 이제 명실상부한 '파워 엘리트'로 떠오르고 있다.

86세대의 대표 주자는 장흥 출신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지낸 임종석(52)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대선 캠프에서 후보 비서실장으로 선거를 이끌었고 집권 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돼 같은 호남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정 운영의 '투톱'을 형성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 지난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데 이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한반도 평화의 명운이 걸린 다음 달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이다.

임종석·전해철·송영길 등 명실상부한 파워 엘리트 서울시장·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대거 출사표 호남의 미래 자산... 선거 후 차세대 주자 부상 기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목포 출신 전해철(56·안산 상록갑) 의원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당과 후보 간 가교 역할을 했다. 선대위 조직 특보단장과 호남특위 의원을 맡아 광주·전남 발전 공약 및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고흥 출신으로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노동운동을 했던 4선의 송영길(55·인천 계양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맹활약하며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새롭게 부상했다. 대선 이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 정부와 정치권 변화에 호응하듯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에도 민주화운동을 이끈 86세대와 시민운동가 출신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장에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6그룹의 리더격인 우상호(56·서대문갑) 의원이 시민사회 대표 주자인 박원순 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울시장

차출론이 거론됐던 임종석 실장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전해철 의원이 당내 조직력을 바탕으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이재명(54) 전 성남시장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국회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는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최인호 부산시장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화의 성지'로 선거 때마다 민심의 방향타 역할을 해온 광주시장 후보군도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운동 경력의 인사들이 대세다. '시민 시장'을 표방해 온 윤장현 시장은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5·18 진실 규명과 광주 정신 세계화에 힘쓰며 통일·인권·환경 운동을 이끌어 지역 시민운동의 대부로 불린다. 강기정 전 국회의원과 최영호 전 남구정장은 서울 파월던 군부 독재 시절 학생운동을 이끌며 육고까지 치른 지역 정치권의 86세대 대표 주자로 꼽힌다. 재선 광산구청장을 지낸 민형배 예비후보는 참여자치 21 대표와 지방분권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54)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985년 광주 학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서울 미문화원 점

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복역한 뒤 정치권에 입문해 나주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냈다.

86세대와 민주화 세력의 지방선거 출마 바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주도 세력의 판도 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앙 정부에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 정부에도 세대 및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촛불 민심이 요구해온 정치 개혁과 국민 주권, 지방 분권이라는 시대정신과도 맞아 떨어진다.

현 정부를 이끄는 호남 출신 86세대와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민주화 세력이 국정에서 이어 지방 정부 개편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차세대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역대 대통령 45명 가운데 주지사 출신이 절반 가까이 되는 데, 이제 우리의 시·도지사 선거 역시 미래의 대통령감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호남의 자산(인물)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번 대선에서 호남은 아예 없었다. 단 한 명의 후보도 찾을 수 없어 타 지역 출신을 '임양'받거나 '임자'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 대선에서는 우리도 꽤 든든한 자산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들 호남 출신 86세대 중 또 어떤 누군가가 차세대 지도자로 훌쩍 성장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빠른 2022년 대선부터 우리 호남도 당당히 대권 주자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6·13 선거 현상

기초단체장 후보

최진 전남구청장 출마 "남구 획기적 발전시킬 것"



최진 전 더불어민주당 동남갑(남구) 지역위원장은 21일 "그동안의 정책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남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광주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최진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의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남구 정치문화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갈등과 불신의 정치를 버리고 화합과 신뢰의 정치로 환골탈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벤처 성공모델 도입, 양립동 선교사문화의 세계화,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의 지원, 맞춤형 복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오섭, 북구에 제2 I-PLEX 건설 제안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조오섭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1일 북구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제2의 I-PLEX 건설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광주역 유류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구상, 옛 국군병원 이전부지 및 주변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구상, 전남·일신방직 유류부지를 이용한 도시 재생 활성화 구상을 위한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1단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청년창업업을 위한 복합 지원 시설로서 '스타트업 및 청년창업 임대공간(I-PLEX) 건설과 유류 모델 매입과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창업자 지원 주택 건립이 용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영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고흥군수 출마



공영민(63)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21일 고흥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 부의장은 이날 민주당 고흥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고흥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고흥으로, 떠나는 고흥에서 돌아오는 고흥으로 만들고 싶다"며 "기획재정부·제주특별자치도 등 30여년 공직경험을 고흥을 위해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고흥 515개 마을과 논밭을 누비며 군민들의 수많은 의견을 들었다"면서 "군민과 대화를 통해 고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을 마련했다"고 준비된 군수임을 강조했다. /고흥=주정훈기자 gjju@kwangju.co.kr

정연선 도의원 신안군수 출마 선언



정연선(신안2·민주평화당)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 21일 신안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사업가로서 경영을 알고 지방의정 활동으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터득했다"며 "이렇게 쌓은 자산을 시안의 미래를 일구는데 써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군민의 숙원인 연륙·연도교 사업의 조기 완공, 도서 물관리 종합 대책 마련, 수산양식 저장·가공시설 현대화 추진, 체류형 농업 복합 6차 산업화, 1심 1특화작목 육성,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산업 기반 확충, 신안 천일염 세계 명품화, 읍·면 섬에 헬기장 신설 등을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불산단에 200억 들여 레저선박부품 기술센터 세운다

전남도 고부가가치 레저선박 육성

전남도가 영암 대불산단단지 200억원을 들여 레저선박부품기자재 기술지원센터(조감도)를 건립한다. 불황에 허덕이는 전남지역 조선·해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고부가가치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해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암 대불산단에 200억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레저선박부품기자재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한다.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건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자재 비용 절감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기자재를 수입하는 실정이다.

기술지원센터는 레저 선박 기자재 시험과 인증을 지원하는 장비 21종을 구축하게 된다. 전남도는 레저 선박 산업 육성을 위해 해마다



기술개발 사업비도 지원한다.

올해는 국·도비 45억을 들여 센터를 건축하고, 장비 구입과 디자인 개발 등을 돕기로 했다.

정연선 전남도 지역경제과장은 "대형 조선소 하도급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레저선박 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202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82% 달성한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내년도 국비 3152억 신청

전남도가 전국 최하위인 하수도 보급률은 2020년 82%까지 끌어올린다.

전남도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내년도 하수도 분야 국비 예산 3152억원을 환경부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2032억원)보다 55.4% 증액된 규모다.

주요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 1050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1103억원, 도시집수 예방사업 395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604억원 등이 다.

특히 2015년부터 추진한 도시 침수 예방사업은 상습 침수 피해지역의 관로, 저류시설, 빗물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여수 등 6개 시군 10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다.

2019년에는 순천 등 계속사업 7개 지구를 조

속히 마무리하고, 여수 도원사거리 일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현재 76.1% 수준인 하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82%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신청한 국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송경일 전남도 환경국장은 "전남은 섬이 많아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며 "국비예산 요구 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사업별로 꼼꼼히 검토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

가장 힘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손해보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도, 예상치 못한 아픔에도
당신이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손해보험입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에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 AIG, The-K, NH손해보험